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 돌입, 물류대란 오나?

화물차주 38만명 중 화물연대 노조원 1만590여명 동참
2008년보다 강도 적을 것으로 예상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4일 부산항 등에서 출정식을 갖고 파업하기로 결의했다. 화물연대가 총 파업은 지난 2008년 이후 4년만이다.

현재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 인상 및 면세유 지급,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화물차주 38만여명 가운데 조합원으로 등록된 1만590여명과 주요 항만의 비조합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항 출정식에 이어 포항에서는 화물연대가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왕 ICD에서는 화물연대가 출정식을 준비하고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두 곳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울산에서는 지난 24일 화물연대 비노조 차량에 연쇄 화재 사고가 발생한 만큼 1시간 단위로 경찰차들이 순찰을 하고 있으며, 진주 역시 방화 관련건으로 경찰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적재물 공장으로 이전 해당업체가 피해금액을 산출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에서는 신항·북항 모두 별다른 동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차주는 지난 2008년 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며 강경 대응은 예고하면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때는 상당수 화물연대 미가입 차주들이 동참하는 바람에 파업 이틀만에 부산항의 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노조원 역시 파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만큼 전체 인원의 최대 8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화물연대 측은 내다보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008년에도 일주일간 파업을 벌여 56억달러 규모의 수출입 차질을 빚은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9년에도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기로 했으나 참가자가 적었다”면서 “이번에도 지난 2008년보다 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및 지경부, 노동부, 행안부, 법무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은 오후 2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표준운임제 법제화, 면세유 지급 등’ 요구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부터 부산항 등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 인상 및 면세유 지급,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전국 화물차주 38만여 명 중 조합원으로 등록된 1만 590명에 주요 항만의 비조합원들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자제를 위해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하여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며,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중요 물류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상시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철도 및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철저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오후 대국민 담화 발표

파업연대가 오늘(25일) 오전 7시부터 운송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와 부산에서는 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 화물연대가 3년 만에 파업을 하며 잇따라 출정식을 열었죠?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전면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는 총파업 투쟁 승리를 다짐하는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2009년 이후 3년 만인데요.

화물연대 요구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표준임제제를 법제화하고, 운송료를 30% 이상 인상하며,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는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컨테이너 운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전체 2만 명의 컨테이너 운송자 중 화물연대 소속은 전체의 20%에 달합니다.

큰 파업이었던 2008년 화물연대 파업은 일주일간 지속되며, 총 72억 원의 수출입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운송거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신항에서도 오전 9시부터 4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여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9개 중대 500여 명이 주변에 배치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부산항 컨테이너 장치율은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물류 수송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행안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vs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물류대란 현실화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 소속 조합원 1만 2500여명의 총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

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중단을 선언해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2008년보다 기름 값은 27%나 올랐는데, 운임은 7%만 인상되어 화물노동자들은 월 320시간 넘게 일하고 시급으로 따져서 2천 몇 백원의 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전근대적 중간착취제도에 다름 아닌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유류환급금은 재벌 운송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어 역대 최고의 이익을 올리는데 퍼부어졌다”며 “제멋대로 운임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차량구입비부터 기름값, 도로비, 보험료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화물노동자들뿐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본부장은 “2008년 6월 19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표준운임제를 정부는 곁에 포장만 바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참고운임제로 변질시켜버렸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24일 오후 6시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단계로 격상하고, 국토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연간 최대 1786만원)을 중단하고,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4일 새벽에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27여대의 화물차 방화사건과 관련해 해당 차량이 화물연대 미 가입 차량임을 파악하고, 폐쇄회로 TV 등을 통해 현재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한 달 300시간 일하고 손에 쥐는 돈 69만원" 2012-06-25

[CBS<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

지난주 택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화물연대입니다. 오늘 아침 7시를 기해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치솟은 연료비 때문에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건데요. 정부는 “정당성 없다, 엄정 대응하겠다. 면허정지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의 파업, 한두 번이 아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자기 화물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1인 기업. 그러니까 택시로 말하자면 개인택시라고 보면 됩니까?

◆ 김달식> 네, 그런 개념인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앞으로 등록이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저희 돈으로 구입해도 개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느 기업에 속해서, 또 거기서 1인 차주들이 하청을 받는 형식?

◆ 김달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총파업은 얼마나 참여하세요?

◆ 김달식> 현재 저희 조합원 1만 2,500여 명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요. 마찬가지로 비조합원 역시도 상당수가 참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 8, 90% 가까이 참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김현정> 사실은 1만 2,500명의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38만명으로 훨씬 더 많은데, 비조합원 중에서도 8,90%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 김달식> 네.

◇ 김현정> 화물연대 요구사항, 단도직입적으로 됩니까?

◆ 김달식>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라는 것이고요. 열악한 화물운송료를 30%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은 이 땅 물류의 동맥이자 경제발전의 역군으로서 국가적 수출물량도 싣고 수송하는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면세율을 지급하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불평등 계약서. 즉,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는 계약서 같은 화물운수사업에 포함된 계약서를 전면 재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뭔가요?

◆ 김달식> 위탁 계약서인데요. 그것을 표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위탁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이런 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정부와 좀 대화해서 만들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화물노동자들이 무늬는 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고용된 고용노동자 성격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 적용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서 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럼 가장 핵심이 산재입니까?

◆ 김달식> 현재의 가장 핵심은 표준운임제와 운송료 30%입니다.

◇ 김현정> 표준운임제와 운송료 30%를 인상해 달라?

◆ 김달식> 어쨌든 법제도 개선을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 법을 바꿔야 될 부분들은 국회가 열리고 그런 입법기관을 통해서 제기될 문제니까 향후 7, 8, 9까지 이어서 계속 진행을 시켜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운송료 30% 인상? 지금으로는 부족한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3, 4년마다 계속 화물연대 파업이 있어 와서 운송료도 꾸준히 인상이 돼왔다.'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 김달식> 그렇지 않습니다. 운송료 30% 하면 보통 노동자들의 경우는 임금 상승 몇 퍼센트인데..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총파업 직후에 운임이 잠시 올랐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정부 공식자료를 보더라도 8% 정도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당시에 비해 15% 가까이 올랐고요. 2009년도부터 유류세가 다시 올라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한 7% 정도 늘은 상태입니다. 화물연대가 최소한 운임 인상으로 30%를 제시했는데 사실은 운임 인상이 아니라 2008년 수준으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운임은 나라에서 정해 줘니까? '한 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이만큼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 김달식> 저희들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운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지금은 대형 회사와 대형 운송사가 결정하면 결정 금액에 저희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싫든 좋든

그것을 수송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깐요.

◇ 김현정> 그게 바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부분이군요. '지금 하청의, 하청의, 재하청 이런 식으로 해서 화물차 차주 겸 운전자인 분들이 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수수료 떼이고 이렇게 된다.' 차라리 택시처럼 법제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달식>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국민들도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표준요금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는데 무늬만 있는 표준운임제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기존의 컨테이너 수송 표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 신고해서 그 금액에 운행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거데.. 그 금액이 기존에서 보통 3,40% 정도 인하된 금액으로 운송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예상되는데 국민들은 '언제까지 무기한 파업할 거냐.' 이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 김달식> 운송료 문제와 표준운임제에 대한 약속만 담보되면 가급적 파업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화물연대 지도부나 조합원들의 입장입니다. 파업을 즐겨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합원들의 경우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 할부 금액을 파업 중에도 납부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가뜰이나 지금 먹고살기 어려운데, 파업으로 인해서 일감을 수송하지 못해서 메워나가야 하는.. 예를 들어 돌려막기 하는 이런 상태에서 파업이 지속되고 오래된다면 저희 조합원들의 고통 또한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따라서 국가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피해, 그리고 저희 화물노동자들의 아픔들이 더 이상 더 확대되기 이전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심정이지만 어쨌든 합의될 때까지 파업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 김달식> 그렇죠. 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개선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이 또 우리 조합원들의 정섭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달식> 한 달에 평균 한 69만원에서 80만원 안팎이거든요.

◇ 김현정> 평균이요?

◆ 김달식> 그런데 더 웃기는 얘기인데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실제 화물차량 수임료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할부금, 타이어 비용, 기름값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남는 금액의 통계가 ... 여하튼 314시간을 일합니다. 이 정도 노동하면서 70만원 안팎의 수입을 번다는 게 참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은 파업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년 기다렸는데...정부, 표준운임료 약속 헌신짝 2012-06-25

**운송료 중구난방·고유가 겹쳐 시급 2197원 '벼랑'
9년 전 해주겠다고 '노동자성 인정'도 나몰라라
부산 등 4곳서 화물차 27대 화제...경찰 수사 나서**

화물연대 파업 쟁점

쟁점	상황
표준운임제 도입	정부는 2008년 6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결정하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운송료 30% 인상	운송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대기업 화물운송업체가 모여 있는 '통합물류 협회'와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음
노동기본권 보장	정부는 2003년 5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인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보호법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진척 없음

화물운송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2003년과 2008년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일으켰던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쟁점은 표준운임제다. 정부는 2008년 6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결정하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화물운송료는 '중구난방'이다. 화주-운송회사-운송노동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계약관계에서 높은 중간 수수료와 최저낙찰제의 영향으로 직접 물건을 나르는 운송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턱없이 낮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기름값·도로이용료 등 직접비용 부담은 늘어만 가고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운송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이 시급 2197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화물운송 시장정보시스템을 보면, 2008년에 견줘 올해 부산~수도권 왕복운임은 7% 인상됐으나, 경유값은 24.2%나 올라 화물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름값·도로이용료 등을 고려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표준임제 법제화는 찬성하지만,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처벌조항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또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당장 올해 운송료 30% 인상과 면세유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형운송사가 가입해 있는 ‘통합물류협회’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자성도 논란거리다.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은 물론 노동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2003년 화물연대 첫 파업 때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가 표준임제 법제화라는 4년 전 합의 사항을 외면한 것이 이번 파업의 원인인 만큼,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 운운하기에 앞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24일 새벽 부산·울산·경남·경주 네 지역에서 화물차 27대가 잇따라 불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5일로 예정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화물연대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당국이)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해 물류대란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바퀴달린 노예’가 됐다” 2012.06.25

화물연대 "화물노동자 삶은 최악의 상태"

화물연대는 25일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현대판 ‘바퀴 달린 노예’로 만들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파업에 들어가며 발표한 대국민 성명을 통해 “2008년보다 기름 값은 27%나 올랐으나 운임은 7%만 인상돼 화물노동자들은 월 320시간 넘게 일하고 시급으로 따져 2천몇 백원의 돈을 받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삶은 최악의 상태”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008년 6월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표준운임제’를 정부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참고운임제’로 변질시켰다”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도 못 만들고, 산재 처리도 받을 수 없는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근대적 중간착취 제도인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유류환급금은 재벌 운송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 역대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운임이 제멋대로인 상황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차량구입비부터 기름값, 도로비, 보험료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화물노동자뿐”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정운임을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없앨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물류자회사를 비롯한 재벌 운송사들 역시 중간착취에만 골몰하지 말고 화물연대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오후 2시 대국민 담화문 발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도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곧 파업 종단을 요구하는 합동 담화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언제 발표되니까?

정부 담화문은 오후 2시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발표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합니다.

당초에는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표하기로 했으나, 파업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과 형식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이 정당성을 잃은 행동이라며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화물 운송료 현실화 등의 요구사항은 화물연대 측과 계속 대화를 해나가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한다는 입장도 밝힐 계획입니다.

담화문에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요금제나 유가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비상수송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부는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도 어제 오후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고, 파업 돌입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육상 화물 운송을 철도와 해운 수송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중인 차량과 인력을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용 화물 차량의 '유상 운송'을 허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견인 조치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관련 정부합동 대국민담화문 2012-06-25 14:00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정부 합동 대국민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경제의 어려움으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깊은 가운데 안타까운 담화를 발표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을 잇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경기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와 약속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참여하에 도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금년도 들어 새로 제시한 법령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와 만나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경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상회하는 등 화물 운전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심분 이해하여 화주 및 운송업체가 운송료를 현실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과 같은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국가물류를 불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6월24일 새벽 발생한 비화물연대 차량 27대에 대한 방화사건은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검거하여 엄정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내에는 중앙수송대책본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이미 마련된 대체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여 운송 참여자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반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겠습니다.

화물 운전자 여러분!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빠 운송 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화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운행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주 및 운송업체 여러분!

최근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상생협력 차원에서 화물운전자들의 운송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따라 다소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조금만 인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25

법무부장관 권재진 안전부장관 맹형규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화물연대 MB정부 3번째 ‘되풀이 파업’] “유가보다 다단계 물류가 더 문제”

10년째 표준운임제 요구 ... 유가 낮춰도 화주·운송사 배만 불려

"간부보다 조합원들이 '제발 파업 좀 하자'고 하던데요. 다단계 물류구조에서 경유가 좀 낮추면 뭐합니까. 화주가 이익 챙기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수익이 줄었어요."(화물연대 성경선 광주지부 사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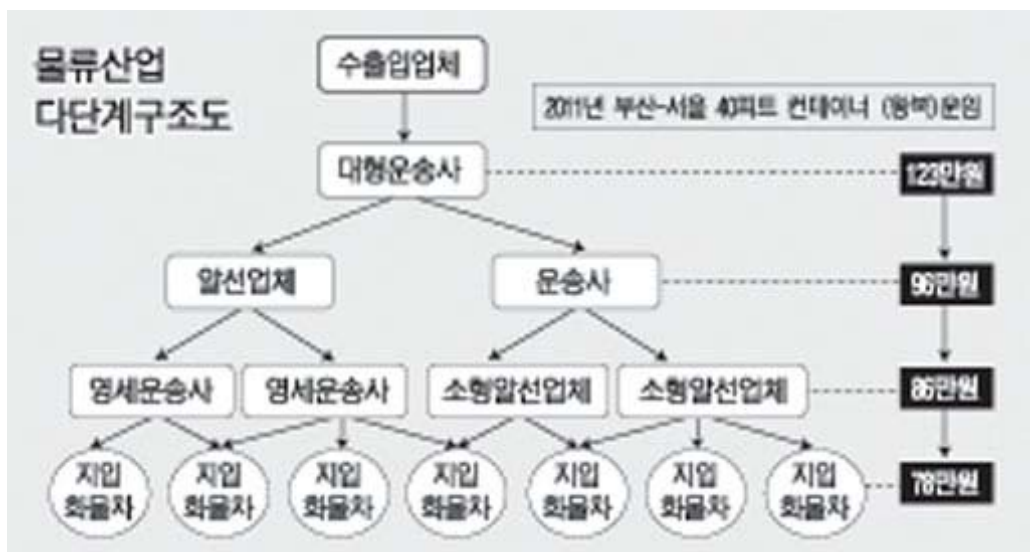
"표준운임제하자고 10년간 외쳤습니다. 정부에 또 속아야 합니까. 오히려 비조합원들이 왜 파업 안하냐고 합니다."(화물연대 최원석 대전지부 사무부장)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3년만에 또 벌이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물류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됐다.

화물연대는 지금의 물류산업을 화주(화물주인)와 대형운송사만 배불리는 후진적인 체계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주요 운송사들은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설립해 계열사 관계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집단운송거부의 최대 쟁점인 표준운임제도
 법제화도 이같은 상황에서 나왔다. 화물차주 수입은 2008년 상반기 이후
 가장 악화됐는데, 특히 지난해 이후 운임료 하락과 운송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가 폭등이 운송거부의 직접 계기다.

예로 부산과 수도권을 오가는 화물차의 운임은 지난 2008년 1분기
 27만5200원에서 올 1분기에 7%(77만5000원) 올랐다. 하지만 경유가는
 같은 기간 1472원에서 1829원으로 24.2% 상승했다.



최근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가를 소폭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익은 화주에게 돌아갈 뿐 화물차주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다.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입업체가 자신의 계열사인 운송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다시 중간알선업체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일감을 내려주는 다단계 하청구조다.

문제는 화물차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실제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들은 중간 수수료만 챙기는데, 이같은 중간거간비가 운임료의 40%에 이른다.

화물연대는 이미 2003년부터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화물차주의 최저수입을 일정 보장토록 한다는 이 제도는 2008년 물류대란 당시 이명박정부가 법제화를 약속했던 합의사항이다.

다단계 하도급 물류체계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지난 1분기 고유가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운송사들은 고실적을 누렸다.

현대·기아차그룹의 물류업체인 글로비스는 111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했고, 대한통운은 영업이익 317억원을 달성해 79%나 늘었다. 세방의 경우 영업이익 164억원으로 32%, 동방은 영업이익 40억원으로 333% 고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화물차주들의 삶은 악화됐다. 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월평균 수입은 191만원이고 노동시간은 월 315시간에 이른다.

하루 15.7시간(주5일 근무로 환산)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4544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혁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임료와 경유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통합물류협회에 4년간 운임삭감분 물가인상분을 고려해 운임료 30%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조합원 12000명+a 참여 '물류대란 우려' 2012-06-25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7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 파업을 시작해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03년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바 있는 화물연대는 이번이 세 번째 총파업으로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시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화물연대에는 전국 화물차주 38만명 중 1만2000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미가입 화물차주(비조합원)까지 합류한다면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지난 24일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국토해양부는 운송료 인상에 관해 화물연대와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나 불법 집단행동이 강행될 경우 엄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앞서 차주 운임 30% 인상 및 면세유 지급, 산재보험 전면 적용,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물류를 멈춰 세상 바꾸자"...공포의 화물연대 파업 재현 2012-06-25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2003년부터 2~3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 구호가 25일 아침 또 다시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만든 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이날 아침 7시를 기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들의 구호처럼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 9대 무역강국인 대한민국 전체 물류운송의 90%를 도로운송이 담당하는 만큼 화물연대의 파업 효과는 이번에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38만명의 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1만명이 참여중인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2월 총파업 투표를 통해 이미 예고된 것이다.

지난 2008년 파업 타결 때 약속했던 물류제도의 선진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또다시 파업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화물연대 윤춘호 선전실장은 “물류강국이란 말이 부끄럽게 전근대적인 지입제와 다단계 등으로 운송료를 착취당하는 화물노동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관련법안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개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화물차주들은 월 32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에 평균 18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차량 할부금 등으로 지출돼 상당수가 최저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운송회사가 독단적으로 정하고 있는 운임 결정 방식의

개선과 산재보험 적용, 유류값 보조 등을 이번 파업의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이번엔야 말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업종 변경이라도 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여서 벌써부터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돌입.. 물류 '비상등' 2012-06-25

오전 7시부터 집단운송 거부.. 주요 항만 등 물류이동 차질빚을듯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됐다. 2008년 6월 이후 4년만이다. 이에 부산항과 평택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부산항 등지에서 출정식을 갖고 25일 오전 7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 인상 및 면세유 지급,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파업에 따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수도권 조합원의 경우 의왕역 인근 의왕ICD에 집결할 계획이다. 화물연대에는 전국 화물차주 38만여명 중 1만590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이번 파업에는 비조합원까지 가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정확한 파업 참여 인원은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각 항만별 출정식 참여 인원을 추산한 결과, 약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방침에 대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면서 "파업 때문에 생필품이나 수출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수송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파업 참여 차량은 유가보조금(컨테이너 연간 최대 1786만원) 지급을 중단기로 결정했다. 경찰도 순찰인력을 대폭 늘려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오전 11시에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나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새벽 부산, 울산, 경남 창원·함안, 경북 경주 등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물차량 연쇄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 27대 가운데 26대가 화물연대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나머지 한 대는 화물연대 가입됐으나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파업과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화물연대 4년만에 총파업 개시 '물류대란' 예고 2012-06-25

화물연대 파업이 25일 7시를 기해 시작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부터 부산항 등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 인상 및 면세유 지급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전국 화물차주 38만여명 가운데 조합원으로 등록된 1만590명에 주요 항만의 비조합원들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앞서 전날인 24일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 경남 항만 등에서 27개의 화물차 방화가 잇달아 이번 파업과 관련성이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화재 차량 모두가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파업 초기부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날 오후 6시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물류대란에 대비해 육상 화물을 철도와 해운수송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파업 참여 차량은 유가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예고했다. 또 경찰력을 동원해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운송 중 화물연대로부터 피해를 입은 차량에는 정부가 차량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약속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오전 11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8년에도 일주일간 파업을 벌여 72억5800만달러의 수출입 차질을 불러왔다. 다음해에도 총파업을 벌였지만 참가자가 적어 유야무야 됐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2008년보다는 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연대 25일 파업, 비조합원 참여 규모가 '변수' 2012-06-25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국내 컨테이너 수송량의 20%가량을 담당하고 있어 주요 항만의 수출입 업무와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조합원 화물운전자들이 파업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24일 “치솟는 기름값과 낮은 운송료 때문에 화물노동자 대부분이 실업자나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며 “생존권 확보를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파업에 나서는 건 2003년과 2008년 이후 세 번째”라며 “기름값을 낮추든지 운송료를 올려주든지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25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5개 지부별로 출정식을 가진 뒤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항구와 전국의 제철·시멘트 공장 주변 등에서 출정식이 열린다.

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경북 포항시 호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위치한 화물연대 포항지부 사무실에는 40여명의 조합원이 나와 25일 출정식에 쓸 현수막과 만장, 깃발을 만들었다. 이들은 ‘고달픈 인생, 이번에는 끝장내자’ ‘화물악법 철폐’ 등이 적힌 현수막을 만들고 복지관 운동장에 대형 천막 6개를 세웠다.

인천과 경기지역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만드는 등 파업 준비로 분주했다.

박종관 인천지부장은 “조합원 600여명과 비조합원 등 화물차 1000여대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화물차들이 운행을 중단하면 인천항 물류 수송의 50% 이상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화물노동자는 3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화물연대에 가입 중인 조합원은 1만2000명가량이다. 규모 면에선 전체 화물노동자의 3% 수준이지만 조합원 상당수가 컨테이너 화물트럭 운전자들이라 전면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입 업무와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내 도로를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일일 3만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트럭 4000대가 이번 파업에 참여, 일일 컨테이너 물동량의 20%가량인 7000TEU의 운송공백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는 2주간 파업이 지속되면서 65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대 규모였던 2008년 파업 당시는 1만3000여대의 화물트럭이 1주일간 파업에 참여한 결과 56억3000만달러의 수출입 피해(한국무역협회 집계)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파업에 대비해 각 항만별로 군 컨테이너 투입, 기차 운송량 증대 등 비상운송대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개인화물이나 소규모 용달 노동자들까지 파업에 참여할 경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화물연대 윤창호 사무국장은 “운송료와 기름값 문제는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비조합원들도 대부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거에 비해 비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과거보다 명분이 적어 비조합원의 참여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도 1주일 이내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화물연대 파업 앞두고…미가입 차량 27대 연쇄 방화 2012-06-25 경찰, 전담반 구성 CCTV 분석

24일 새벽 울산을 비롯한 영남의 4개 지역에서 도로변 등에 주차된 화물차량 27대에 대한 방화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7분께 경주시 외동읍 임실리와 모화리 일대 7번 국도변 등 3곳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량 5대 중 1대가 전소되고 나머지 4대가 일부 불에 타는 등 오전 0시35분부터 5시10분 사이 부산·울산·경남 등지에서 상시 주차지역과 국도변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27대가 방화로 보이는 불로 훼손됐다.

이날 오전 3시55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LPG충전소 인근에 주차된 11t 화물트럭에 불이 났다. 트럭과 적재된 벽지 등이 불에 모두 타 82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에 앞서 3시37분에는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대성주유소 내 탱크로리와 25t 화물트럭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오전 1시48분께 북구 중산동 보경주유소 인근에 주차된 트럭에서도 불이 나는 등 이날 새벽 2시간 동안 울산 지역에서만 13대의 화물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파업선포식 이후 차량화재가 잇따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이 모두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으로, 25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앞두고 파업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화로 일단 추정된다”며 “검거 전담반을 구성해 CCTV분석 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요금을 끌어올리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로 격상하고, 국토해양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정부는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수송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주요 항만과 물류거점 수송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컨테이너 연간최대 1786만원)을 중단하고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해 생필품이나 수출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주요 항만 마비 현실화

전국 화물차주 38만여명 가운데 조합원 1만590명과 비조합원 일부 포함

2012-06-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이 25일 7시를 기해 시작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부산항 등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국 화물차주 38만여명 가운데 조합원 1만590명과 주요 항만의 비조합원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파업 초기부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전날 오후 6시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화물연대는 차주 운임 30% 인상 및 면세유 지급, 산재보험 전면 적용,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한편 지난 2008년에도 화물연대는 일주일의 총파업으로 72억5800만달러의 수출입 차질을 불러왔다.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물류대란 이어지나 2012-06-25

벌써 3번째, 고질적인 운임문제 매년 반복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003년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와 함께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가 또 다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3년, 2008년 이후 세 번째 총파업이다.

경기도 의왕 컨테이너터기지에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모여들며 10시 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며, 부산항을 비롯한 인천, 평택, 광양, 울산 등 전국 10대 항만과 양산 컨테이너물류기에서도 출정식을 예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전국 화물차주 38만명 중에 1만2000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 전국 조합원의 80% 이상 지지를 얻고 미가입 화물차주까지 확산될 경우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국토해양부는 운송료 인상에 대해 화주와 운송, 화물연대가 자율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경 대응방침을 밝힌 가운데 총파업을 앞두고 비노조원의 화물차 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24일) 새벽 울산에서는 2시간동안 주유소와 도로변 등 7곳에 주차된 화물차 14대가 화재로 훼손됐다. 경북 경주에서도 5대가 불탔고, 경남 창원과 부산까지 포함하면 영남지역에서 모두 27대의 화물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화재사건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부와 운송업체가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에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관련 법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오늘 총파업 돌입...전국 곳곳에서 출정식 2012-06-25

파업연대는 오늘(25일) 오전 7시부터 운송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부산항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전면 파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전면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총파업 첫 날인 오늘 전국 15개 화물연대 지부는 파업 출정식을 열어 총파업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곳 의왕 ICD에서는 도로변에 화물차가 줄줄이 세워져 있고,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 등 파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200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화물연대 요구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표준임제제를 법제화하고, 운송료를 30% 이상 인상하며,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는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컨테이너 운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체 2만 명의 컨테이너 운송자 중 화물연대 소속은 전체의 20%에 달합니다.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은 일주일간 지속되며, 총 72억 원의 수출입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이번 파업이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운송거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트라우마’, 물류업계 눈치보기 극심…“경제 어려운데 물류마저” 재계 반발

2012-06-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가장 밀접한 물류업계는 특히 분주한 모양새다. 현재까진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자칫 파업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25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업계는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화물운송자 38만여명 중 화물연대 소속이 1만2000여명 정도이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전체 파업을 한다고 해도 큰 피해를 입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에 하나 파업이 비노조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긴급 차량 확보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회사 보유 차량 못지않게 협력업체 차량이 많다는 점도 물류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소속 차량이 파업한다면 노사 간 교섭이라도 진행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 차량이 파업에 동참하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며 “파업 규모가 확대되면 물류업계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대외적으로 크게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대형 물류업체와 화물연대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때 업체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과거 화물연대가 파업할 당시 업체의 화물 운송 등을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도 적지 않았다. 그저 내부적으로 보완수단을 마련하며 조용히 정상화되길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고 토로했다.

재계단체도 화물연대 파업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 측은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유럽 경제위기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2008년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화물차량 감차, LNG 화물차 보급,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 차량 확대 등은 이미 완료했고 표준운임제 도입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명분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번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물류 피해 최소화해 적극 나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파업에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정부, 비상수송대책 마련…부산 등 화물차 27대 불타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새벽 경남과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20여 대의 화물차량이 잇단 화재로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 화물차량의 대부분이 비노조원 차량인 점에 주목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동료에 대한 협박용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피해 화물차량이 총 27대, 피해액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격상하고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상수송대책으로는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수송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주요항만과 물류거점의 수송에 투입하는 한편,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화물연대 파업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컨테이너 연간최대 1786만 원)을 중단하고 도로를 막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오늘 '총파업'...정부 '강경 대응' 2012-06-25

운송 거부를 예고했던 화물연대가 오늘(25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파업이 시작됐나요?

(조금 전) 7시부터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예고한 것처럼 총파업에 들어가 운행거부를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의 항만 10곳과 경기 의왕, 경남 양산의 컨테이너 기지에서 출정식도 가질 예정인데요.

화물연대 측은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1만여 명에 비조합원까지 대거 가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면허를 정지 등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화물연대 파업 때문인가요?어제(24일) 새벽엔 화물차 27대가 잇따라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어제 새벽 2시 25분, 울산에서 25톤 트레일러 등 화물차 6대가 불에 탔습니다.

또 울주군 온양읍의 한 주유소 안에 탱크로리와 25톤 카고 트럭에서도 불이 나는 등 새벽 2시간여 동안에 시내 7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경주에서도 화물차 5대가 불에 탔고, 부산과 창원, 함안 지역에서도 잇따라 화물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화물차 대부분은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벌어진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물류 대란 우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4년만입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표준운임제를 전면 실시하고, 운송료를 30% 올려달라는 것, 그리고 기름값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턱없이 낮은 운송료 때문에 생계유지도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오늘 파업엔 노조원 38만 명 중 80%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와 공항, 항만 운송노조도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고 대체 수송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 참가자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선 면허 정지를 비롯해 형사 처벌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물류대란 이어질까

화물연대가 지금 이 시점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가 선언한 파업 개시 시점이 오전 7시입니다.

이에 따라 무기한 운송 거부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 오전 9시부터는 화물 연대 서울·경기지부 조합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간 전국의 항만 10곳과 경남 양산의 컨테이너 기지에서도 각 지부별로 출정식을 갖습니다.

화물연대는 운임요금 30%인상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정부 주도로 최저운임을 정하는 표준운임제 등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물차 운전자는 38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은 1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과거 파업 때처럼 비조합원의 참여도가 높을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매년 1조 500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집단운송 거부를 하는 건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업 참가자에겐 리터당 373원의 유가보조금 지원을 6개월간 중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 운임 인상이 핵심 쟁점인데 실제로 물류대란으로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네, 이들은 기름값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운송료는 전혀 오르지 않는다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윤석/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 기름값은 올라갔고, 운송료는 지금 전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 만약에 안되면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겠다는 조합원이 많습니다.]

물류 대란이 빚어질지 관건은 전체 화물운전자 38만 명 중 37만 명을

차지하는 비조합원의 참여도입니다.

우선 화물연대 측은 비조합원 누구나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 8-90%는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 분석은 다릅니다.

지난 2008년 파업 때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200원에서 1900원 선까지 급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류 대란 오나?' 화물연대 오늘 총파업

운송료 30% 인상 등 요구에 정부는 '무리'...비조합원 차량 방화 발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한 지 4개월 만에 오늘(25일) 오전 7시부터 운송거부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송료 30%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다.

표준운임제는 운송거리와 기름 값 등 운송원가를 고려해 최저 운임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현재는 화주와 차주 간 자율적으로 운임이 결정되고 있다.

화물노동자 38만여 명 중 화물연대 소속은 1만여 명 정도지만 과거 파업 때처럼 비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면 대대적인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화물 운전자에게 해마다 1조 5,00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강행은 지나치다며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새벽 부산, 울산, 경남 창원·함안, 경북 경주 등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물차량 연쇄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 차량 27대 가운데 26대가 화물연대에 가입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가입됐지만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입수,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화물연대 본부장 "한달 314시간 일하고 수입 70만원" 2012.06.25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표준운임제 도입과 운송료 30%인상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달식 본부장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화물차주의 한 달 평균수입이 69만원에서 80만원 안팎"이라며 "지난 3월 한 달간 314시간을 일하고 화물차량 수입료나 할부금, 기름값 이런 것을 제외하고 70만원 안팎의 수입을 받았다"는 말로 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5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화물연대에는 전국 화물차주 38만여명중 1만여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달식 본부장은 이번 파업 규모에 대해 "비조합원 역시 상당수가 참가해 우리가 봤을 때 (전체 차주의) 8, 90% 가까이 참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본부장은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표준임금제 도입, 운송료 30%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 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적용 등을 들며 "핵심은 표준임금제 도입과 운송료 30%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3, 4년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있어서 운송료가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는 인식에 대해 "2008년 총파업이후 운임요금이 잠시 올랐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당시보다) 8% 정도가 하락했다"며 "여기에 물가가 15% 가까이 올랐고 2009년부터는 연립세도 다시 올라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7% 정도 늘었다"고 설명하며 "최소 운임인상으로 30%를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은 운임인상이 아니라 2008년 수준으로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해서도 "지금은 대형회사와 운송사가 결정하면 우리들은 먹고살기 위해 줄든 싫든 수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표준요금제 도입은 일반 국민들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로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달식 본부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운송료 문제와 표준운임제에 대한 약속만 담보되면 빠르게 (파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라며 "가뜩이나 먹고살기 어려운데 파업이 지속되면 조합원들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개선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게 조합원들의 생각"이라는 말로 파업에 임하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5일 오전 11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오늘 '총파업'...정부 '강경 대응' 2012-06-25

운송 거부를 예고했던 화물연대가 오늘(25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정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은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와 운송료 30% 인상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만여 명에 비조합원까지 대거 가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호 /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 "정부는 우리가 파업할 때마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파업이 끝나고 나면 약속을 뒤집어엮는 게... ."

정부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과 면허 정지 등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강범구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하고, 그럼에도 화물연대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때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광주·전남지부 동참...물류대란 우려 2012.06.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가 25일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지역 물류 운송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인근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지부의 총파업에는 기아차 광주공장, 삼성전자 광주공장, 대우화물 운송조합원 가운데 약 80%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부 역시 광양항 컨테이너지회, 태인지회 조합원 460명과 순천지회 120명, 여수산단지회 337명 등이 총파업에 동참했다.

광주지부는 1시간 동안의 출정식에서 ▲표준임제 법제화 ▲화물운송 관련 법·제도 개정 ▲노동기본권·산재보험 보장 ▲운송료 30%인상 등을 요구했다.

광주지부는 "화물연대 출범 이후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 약속이 수 차례 이어졌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히 이명박 정권은 2008년 약속한 표준임제 법제화 약속을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물류자본은 운송료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교섭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있다"며 "실제 운송비용과 화물노동자의 수입을 토대로한 표준임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화물운송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화주사(생산·제조업체)와 운송·주선사도 화물연대의 운송료 30% 인상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교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정식을 마무리한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소재 화물연대 광주·전남 사무실에서 무기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화물연대의 파업돌입으로 기아차 광주공장,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금호타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지역 대기업들과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수출 차질 등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기업들은 비조합원 위주의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비조합원과 운송회사인 글로비스의 직영 운전자들을 투입해 차량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예비차량 500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관계회사인 대한통운이 운송을 책임지기로 했다.

여수산단과 광양항도 화물연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대책본부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각 자치구, 코레일, 경찰, 31사단, 화물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으로 물류기지·항만·건설현장 등의 봉쇄를 예상해 주요 거점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오늘 파업… 물류 또 멈추나 2012-06-25

MB “경제위기에 바람직 안해”

영남서 화물차 27대 연쇄방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 오전 7시부터 200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 총파업에 들어간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조합원 80.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정부와 화물 운송사는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전면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차질 우려

이번 파업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은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부처와 화물연대가 참여해 여러 차례 논의한 사항”이라며 “운송료와 통행료 등에서 의견 차를 줄이다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물류가 컨테이너 운송이다. 전체 2만 명의 컨테이너 운송자 중 20%인 4000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국토부는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경우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일반 물류에 투입할 방침이다.

○ 물류대란 확산될까

2008년 화물연대 파업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며 총 72억5800만 달러의 수출입 차질을 빚었다. 반면 이듬해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참가자가 극소수에 그쳐 사실상 불발로 끝났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으로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운송중단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운송 거부와 관련된 집단행동은 단호히 처벌할 방침이다.

○ 조직적인 운행 방해 조짐도

파업 전날인 24일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 경남 함안에서 화물차 방화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이후 울산에서 14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영남권 4개 지역에서 총 27대의 화물차가 불에 탔다. 특히 경찰은 화재가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에만 난 것으로 미뤄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재사건은 화물연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MB “조속 타결을”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방침과 관련해 “화물연대 파업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타 숙소에서 참모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며 “파업으로 인해 생활필수품이나 수출 화물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물류대란 오나
‘표준임제 법제화’ 등 5개안 요구**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2008년 6월 이후 4년 만에 또다시 물류대란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항 등 전국의 항만 10곳과 경기 의왕, 경남 양산의 컨테이너 기지에서 출정식을 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표준임제 법제화 약속 이행 ▲운송료 30% 인상 ▲화물운송법 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5가지 안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안건들은 정부와 화물연대 간 견해차이로 4년째 표류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전국 조합원 80% 이상의 지지를 얻고, 미가입 화물 차주들로까지 확산하는 등 동력을 얻게 된다면 전국적인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의 화물차주는 38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1만 2000여명이다.

반면 정부는 지금도 화물운전자들에게 1당 345원씩 매년 1조 5000억원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주동자를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수송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주요 항만과 물류거점의 수송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업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순찰인력을 대폭 늘려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화물연대 파업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타 숙소호텔에서 참모들로부터 국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면서 “파업 때문에 생필품이나 수출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대란 오나

**오늘부터 집단운송거부 표준운임제 의무화 등 요구
연대측 "권고수준 제도 추진 실효성 없다" 주장
참가 여부 따라 정부 혜택·불이익 나뉘어 '촉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24일 "표준운임제가 의무화되지 않아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턱없이 낮은 운송료로 전국 38만 화물차주들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의무화와 운송비 30%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2월 1만1천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집단행동이다. 파업에 발맞춰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도 조합원들이 파업을 독려하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는 등 파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표준운임제 의무화 여부다. 표준운임제는 물량에 따라 운임비를 보장해 주는 정착제로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차주와 화주간에 자율적으로 운임비를 결정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고,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방안에는 이 제도가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다단계 하청 구조를 보이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은 시장경제 원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의 요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파업에 참여한 화물차주들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들에게는 통행료 감면과 경찰 호위, 운송 방해로 인한 차량 파손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화물차 27대 연쇄 화재...'고의 방화'?

화물연대 파업 전날 화물차 27대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24일 새벽 1시 40분부터 4시까지 2시간여 동안 울산에서 주유소와 도로변 등 7곳에 주차된 화물차량 14대가 화재로

훼손됐다.

비슷한 시각 경북 경주에서도 화물차 5대가 불탔고, 경남 창원과 부산까지 포함하면 이날 새벽 영남권 4개 시군에서 모두 화물차 27대의 화물차가 불에 탔다.

경찰은 피해 차량이 모두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차들로, 일부는 다음날인 25일 운행을 하기 위해 화물을 싣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바퀴에 인화물질을 부은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본부는 24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화재 사건은 화물연대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화물연대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정부와 운송업계가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잇단 파업 예고..정부·재계 바짝 '긴장'

**화물연대 '올스톱'..물류 대란 예고
건설노조 민주노총으로 바통 터치**

노동계가 연이어 파업을 시작하거나 예고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파업의 포문은 화물연대가 연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으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설노조도 '노동기본권·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내걸고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와 재계는 이번 동시다발적 파업으로 상당 부분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의 주체는 크게 보면 민주노총 한곳이지만, 전체 조합원 규모가 노동계 추산 70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장형창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24일 “조합원 규모는 3만명이지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비조합원의 업무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대형 관급 공사 현장은 대부분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공무원노조, 교수노조·대학노조 등 16개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2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 등 3대 요구안 쟁취를 내걸고 ‘민주노총 파업 승리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연맹별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건설노조·화물연대 서울광장) ▲최저임금 현실화(여성연맹·민주일반연맹 등 최저임금위원회 앞) ▲정리해고 중단(금속노조 대한문 앞) ▲언론파업 해결(언론노조 MBC앞) ▲교육개혁 실현(대학노조·전교조·비정규교수노조·교수노조 국회 앞) 등의 5대 현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노동기본권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며 “경고 파업이기 때문에 28일 간부 중심으로 3만여명만 상경 집회를 벌일 계획이지만 우리의 요구안에 대한 정부 움직임이 없다면 8월의 경우 총파업을 통해 의견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교통 방해나 운송 방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총도 성명을 내고 “개별 기업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합리적인 교섭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XML

화물연대 파업… 비조합원도 대다수 동참 수출입 물동량 수송 비상

화물연대가 2008년 6월 이후 4년 만에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평택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5일 오전 7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인상 및 면세유 지급,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24일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갖고 총파업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와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이날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석대동 석대쓰레기매립장 화물주차장에서 조합원 총회 및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투쟁방향을 밝혔다.

부산지부 조합원들은 25일 오전 2000여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제2차 출정식을 강행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이 강행되면 부산지역 3만5000여명 비조합원도 대다수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의 경우 지난달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사상 최대인 155만2000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물량의 75%(전체 물동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도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의왕ICD 정문 앞에는 화물차주들이 대부분 차량을 세워둔 채 파업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물동량의 3.2%를 차지하는 평택항도 같은 분위기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주동자를 사법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화물차주는 38만여명이며, 이들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1만2000여명이다. 하지만 화물차주로서의 같은 입장인 나머지 차주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유럽발 금융위기 속에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추진될 경우 수출입 물동량 수송 차질은 물론 세계항만 경쟁력에서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화물연대 6월 25일 총파업… “표준운임 법제화”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를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콜롬비아 국빈방문 중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보고를 받고 “파업으로 인해 생필품 수출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도의 컨테이너 수송 비율 확대와 군수송차 100대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운송거부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1만2000여명 수준으로 전체 종사자의 3.1% 정도”라며 “이들이 다른 차량의 운송 방해만 하지 않으면 물류대란은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운임제는 정부·운송사·화물연대가 함께 최저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제처럼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또 운송료 30% 인상과 면세유 지급,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임상원 수석본부장은 “지난 2월 총파업 결의 후 4개월 넘게 정부, 운송회사 등이 성의 있는 협상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2008년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 법제화를 이번에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광주·전남 동참.. 물류대란 재연되나 2012.06.24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25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2008년 6월 이후 4년 만에 또다시 물류대란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부는 25일 오전 11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서문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는 기아차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대우화물 운송조합원 모두 참여한다.

전남지부의 경우는 광양항 컨테이너지회와 태인지회 조합원 460명과 순천지회 120명, 여수산단지회 337명의 조합원도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전국적인 총파업에 동참한다.

화물연대는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 이행과 화주사의 운송료 30% 인상, 화물운송법 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 모두 5가지 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앞서 여수산단 화학업체와 광양항, 광양제철소 관련업체 등은 지난 일주일동안 상당수 물량을 사전 방출했다. 또 파업이 시작되면 열차와 선박, 비조합원 차량 등을 통해 물량 수송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전국 조합원 80% 이상의 지지를 얻고, 미가입 화물 차주들로까지 확산하는 등 동력을 얻게 된다면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세계적 경기불황과, 화물운전자들에게 1당 345원씩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추가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순찰인력을 대폭 늘려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 엄정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25일 총파업..."적자 운행해야 하는 상황"

정부 강경 대응..."국가 신인도와 국격 떨어뜨리는 행위" 2012-06-24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2008년 파업 이후 4년 만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월 총파업 찬반 투표서 80.6%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신인도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2008년 화물연대와 약속했던 표준운임제 시행 및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을 받고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008년 1분기에 비해 올해 운임은 7% 인상에 불과했으나 경유가는 24%가 올랐다"며 "여기서 기름 값이 20원만 더 올라도 적자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운임제는 정부가 강제력으로 표준 운임을 고시해서 운송 경로와 상관없이 물량을 수주하면 운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화물운송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자신이 유류비를 총당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기름값이 오를수록 그만큼 자신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기름값에 상관없이 일정한 운임을 받게 된다.

"약속한 표준운임제,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운송시장은 단단계 하청구조로 돼 있어 중간착취 비율이 전체 운임의 40%에 해당된다. 이에 화물노동자의 최저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표준운임제 도입은 그간 여러 차례 합의가 있었다. 지난 2006년 국회의원들이 약속했고 정부는 2009년까지 법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표준운임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안 수준으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0년 가까이 요구해온 표준운임제는 2008년 6월 정부가 빠른 법제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껏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정부가 최근 추진하려는 표준운임제는 지입차주의 최저운임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체의 운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변질됐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의 당초 취지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의 맨 밑바닥에 있는 지입 화물차주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며 "정부 추진안은 표준운임제를 정부 권고안 정도로 제시, 사실상 아무런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제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바람직하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2003년과 2008년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최근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집단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 당 345원씩 매년 1조500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교통방해나 운송방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주동자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23일(현지시각)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타 숙소호텔에서 참모들로부터 국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생필품이나 수출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24일 새벽 영남권 4개 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27대에 대한 방화사건이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파업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화로 추정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MB, 화물연대 파업 부적절? 무책임한 발언

민주 “MB, 화물운송업계 구조적인 문제 해결 외면해놓고…한심하다”

민주통합당은 24일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화물연대 파업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매우 무책임하며 대통령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화물운송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하며 반(反)노동자 정책으로 일관해오지 않았느냐. 한심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도 낮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도 국내 상황에 노심초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민정서를 고려않는 신중치 못한

발언은 제발 자제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방침과 관련해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국토해양부에 “파업으로 인해 생필품이나 수출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생존권 문제vs불법파업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선언하며 "물류대란"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엄중 대처와 함께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는 전체 조합원 중 56.7%가 참여한 총파업 투표에서 80.6%의 찬성율로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이달 22일 오후 12시경에 화물연대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오전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 측은 "정당성을 상실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 측은 곧바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파업이라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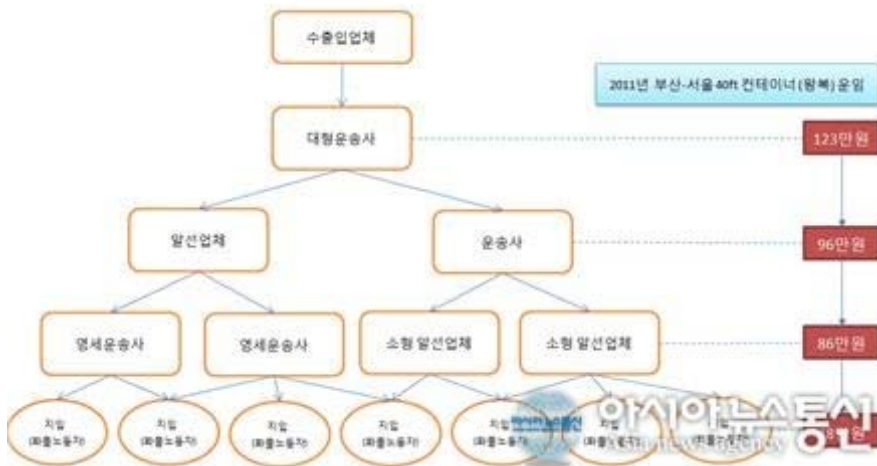
◆ 화물연대 측 "정부 약속 불이행·생존권 위기"

화물연대 측은 2008년 6월, 2009년 6월 이후 약 3년만에 총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지난 2월 기자회견, 5월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6월 말 총파업을 예고했고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돌입한다"며 "이번 파업에 화물운송 노동자 80%가량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은 ▶표준임제 법제화 ▶화물운송관련 법제도 재개정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이다.

화물연대 측은 "이와 같은 요구는 3년 전과 같으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방 사업보고서, 교통연구원 화물운송정보시스템, 교통연구원 운송-주선업체 조사보고서(2011)를 토대로 화물연대 자료를 재구성한 표. (사진제공=화물연대)

화물연대가 법제화를 촉구하는 표준운임제는 대형운송사가 결정하는 신고운임제와 관련이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현재 수출입업체(대기업)→대기업
운송업체→중간알선업체→화물노동자(화물차주)로 하청이 이뤄지면서 중간
수수료가 전체 운임의 40%에 해당한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최저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를 주장하는
것.

또 화물연대의 화물운송법관련 법 개정 요구와 관련 현재 기름값의 40%에
가까운 세금을 면제한 면세유 지급, 불합리한 계약 관행 제약 및
표준위수탁계약을 법제화 적용을 요청했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차주라는 이유로 노동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운송업체과 고용관계라는 점을 들어 노동자 기본권리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토부는 "대화는 지속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생존권 위기에 대한 문제이므로 정당한
요구"라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창호 화물연대본부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파업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으며 그간 충분한 의사를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실히
나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거부" 엄정 대처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소식에 2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3년과

2008년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파업을 했던 화물연대가 또 파업에 돌입했다"며 "국가물류를 볼모로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 등 4가지를 완료했고 표준운임제와 화물운송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화물연대와 협의 중이다.

또 2008년도에 유가연동보조금 569억원을 추가 지급했고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관련 법 재정과 산재보험, 운송료 30%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제재할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총파업에 참가하는 화물 운전자에 대해 ▶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교통방해나 운소방해 시 운전면허 취소 및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 파업 주동자에 대해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요구하는 등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 "물류대란" 우려, 비상수송대책 시행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 조합원이 1만2000여명 정도로 추산돼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물류 작업의 차질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총파업에 대한 방안으로 물류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를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또 운송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을 배치하고 비상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화물 유상운송 허용과 함께 이 차량에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철도 및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무역관련 기관인 한국무역협회(무협) 역시 기존의 "파업 정도 파악에 따라"라는 입장을 뒤집고 22일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무협 물류협력팀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파업규모 예측이 안되서 예상 불가능하지만 일단 무역업체가 다른 대체 운송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는 업체들의 애로사항 접수 등을 파악해 봐야 아는 것"이라며 "아직 비상대책반에 대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다소 안일한 답변을 했으나 얼마 뒤 사태를 파악한 무협은 비상대책반을 설치했다.

한편 화물연대 본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파업이 25일 시작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대화창구는 열려있지만 정부가 일전의 "통보식" 협상을 주도한다면 사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되풀이되는 '화물파업' 적극 대화로 풀어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화물연대 파업은 국민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물동량이 제때 운반되지 못하면 당장 수출·입 화물 처리에 비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신뢰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물류마저 막히면
엮힌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과거 두 차례 파업 때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4년 전 파업 때 정부는
운송료 19% 인상과 함께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를 약속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에 투입되는 실제비용과 화물노동자의 수입을 산정해 표준운임을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이다. 정부는 표준운임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두는 건 지나치다며 미적대 왔다. 또 2003년 파업 때
약속한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화물차량
운전자는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형적인 물류구조 탓이다. 다단계
물류구조의 단순화 없이는 어떤 대책도 땀질처방에 그칠 것이다. 수급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만큼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단시간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정부는 '엄정대응'이라며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물연대도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극단적 행동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화주, 화물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부의 '노동자 보호' 외면이 부른 물류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80.6%의
높은 찬성률로 '6월 이후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파업으로 2003년,
2008년에 온 나라가 홍역을 치렀던 물류대란이 재현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파업이 가져올 혼란과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화물노동자들을 나무라기 어렵다. 파업이 불가피할 만큼 화물노동자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려 있는 탓이다. 교통통계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에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월 319시간이었다. 반면에 화물노동자의 평균수입은 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현재 운송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름값이 2008년보다 24%나 올랐고, 수출입 업체→대기업 운송업체→중간 알선업체→화물자동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운송수입의 10~30%가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평균 운임은 7%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런 까닭에 화물노동자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표준운임제란 운송에 실제 쓰이는 비용과 화물노동자의 수입을 산정해 표준운임을 정하고, 이 운임이 지켜지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장치다. 하지만 정부는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게다가 38만명에 이르는 화물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돼 일하면서도 특수고용직의 굴레 속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 아닌 노동자’의 처지다.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보호법안을 만들겠다던 2003년의 정부 약속 역시 구두선에 그친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의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고 늑장을 부린 것이 화물연대 파업의 제1원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 책임은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만 외칠 뿐이다. 수십년 동안 들어온 달고 달은 레퍼토리다. 이래선 당장의 파업 사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물류대란의 악순환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는 표준운임제 등을 놓고 화물노조와 진지한 협상을 벌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대로 처벌’ 방침을 앞세워 압박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 빨리 수습돼야 한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25일 시작됐다. 2008년 이후 4년 만이다.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독한 마음으로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파업이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면허정지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기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이 거칠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물류대란 우려 속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15개 화물연대 지부가 파업출정식을 했고 수도권 물량의 75%를 담당하는 의왕ICD에서도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해 출정식을 열었다. 화물연대에는 우리나라 전체 화물차 39만대 가운데 1만2천대가 가입돼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담화를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표준운임제의 도입과 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이례적으로 화주 및 운송업체에 대해 운전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송료를 현실화 하라고 요구했다. 파업 운전자들을 달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물연대의 주장은 크게 4가지다. 정부가 2008년에 약속한 표준운임제의 도입, 운송사업자와 차주의 불공정한 계약을 없애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산재 보험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이다. 물론 면세유 지급도 요구하고 있다. 운송업체에게는 부담이지만 운전자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파업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원인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권 장관이 밝힌 것처럼 표준운임제의 도입은 정부가 이미 약속 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한 사안이다. 운송료의 현실화는 장관도 공감하는 문제다.

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물 운전자들은 차 안에서 잠을 잘

때가 많다. 그래서 늘 피로하고, 졸리고, 사고 위험을 안고 다닌다.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름 값도 이들에게는 고통일 것이다. 기름 값과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할부금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운전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마침 화물차를 대상으로 27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가 파업과 관련이 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번 파업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정부나 운송업체, 운전자들이 서둘러 타협점을 찾지 않는다면 물류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류비상은 수출입에 큰 타격을 주고,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사자들은 빨리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08년 파업으로 1조5천억원의 수출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류대란 위기, 대화로 해결책 찾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수출입항만인 부산항 등 전국 물류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2003년과 2008년 겪은 것과 같은 물류대란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준운임제 도입 약속 준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이 핵심 요구조건이라고 한다. 표준운임제는 운송비와 수입을 비교해 표준운임을 정함으로써 최저수입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는 강경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집단 운송 거부도 불법행위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나라 안팎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문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미 몇 달 전에 예고됐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기로 지난 2월 초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한다. 4개월여 전이었던 만큼 시간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총파업과 물류대란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에 부닥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물류 거점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년 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엄격한 제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불법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부로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경 대응만이 최선의 해결책인지는 깊이 자문해 볼 일이다. 장시간 운전 등 근로 환경이 열악한데도 수입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적다는 화물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좀 더 귀를 열어야 한다. 오죽하면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라는 자조적 표현까지 나오겠나. 애초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에도 더욱 진지한 자세로 나서야 한다. 표준운임제 도입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다면 대화를 통해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모쪼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영남권 4개 지역에서는 화물차량 연쇄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길가 등에 세워놓았던 화물차량 27대가 불탔다. 경찰의 설명으로는 피해 차량이 전부 화물연대 미가입인 점으로 미뤄 파업 참여를 압박하려는 방화로 추정된다고 한다. 화물연대 측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전담반을 꾸려 폐쇄회로 TV 분석 작업과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니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로서는 방화와 무관하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파업 참여 조합원이 미가입자 운전 차량을 훼손한 행위임이 드러난다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업의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방화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까닭이다.

운송 방해 등 극단적인 행위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립각이 첨예해지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부나 화물연대는 물론 화주와 운송업체 등 당사자 모두 인내심을 갖고 파업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머리를 맞대주기 바란다. 그것이 물류대란을 피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조기 종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 이 상 -